

2012-05 | 책임연구보고서

국제회의 대비 경찰활동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국제회의 대비 경찰활동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최 경 환

목 차

I .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3
II . 국제회의시 경호경비활동	9
1. 주요요인 경호경비활동	9
2. 주요시설 경비활동	11
3. 국제회의시 경호경비활동 평가	14
III . 국제회의시 대테러활동과 집회시위 관리	18
1. 경찰의 대테러활동	18
2. 집회시위 관리	26
3. 대테러활동과 집회시위 관리 평가	30
IV . 국제회의시 기타 경찰활동	32
1. 의사보안활동	32
2. 교통활동	34
3. 민생치안활동	35
V . 결론	37
<참고문헌>	40

표 목 차

<표 1> 국제회의시 경력운용 비교	15
<표 2> 경찰특공대 주요시설 배치	15
<표 3> 연도별 세계테러사건 추이	19
<표 4> 테러유형별 사건	19
<표 5> 경찰특공대 출동 현황	20
<표 6> 테러대상별 사건	21
<표 7> 경찰특공대의 장비현황	24
<표 8> 테러사건 유형별 책임기관	25
<표 9> 제4차 토론토 G20 반대집회시위 현황	27
<표 10> 1~3차 G20 정상회의 시위상황 및 경찰활동	28

I. 서론

1. 연구목적

서울 G20¹⁾ 정상회의(2010년)에 연이어 2012년 개최된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시 경찰의 활동은 두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룩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두 국제회의는 이전의 ASEM(2000년)²⁾과 APEC(2005년)³⁾,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09년)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국제회의로서, 개최 즈음에 테러 관련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상황에서도 경찰의 철저한 경비로 큰 사고없이 큰 성과를 이뤄내었다.

“1990년 이후 대규모 국제회의가 테러와 불법 폭력시위로 얼룩져 회의개최 의의가 퇴색된 경우가 많았으나, 단 한건의 불상사 없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치러냄으로써 ‘안전’ 측면에서도 가장 성공한 국제

-
- 1) 회원국은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캐나다 등 G7에 속한 7개국과 유럽연합 의장국에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를 포함하는 신흥시장 12개국을 더한 20개국이다. G20은 5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오스트레일리아가 1그룹, 러시아·인도·터키·남아프리카공화국이 2그룹, 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가 3그룹,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4그룹, 한국을 포함한 일본·중국·인도네시아가 5그룹이다.
 - 2) 회원국은 아시아 13개국(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과 유럽(EU) 28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체코, 폴란드 등) 그리고 EU집행위 등 총 38개 회원국이다.
 - 3) 현재 회원국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베트남·페루 등 21개국이다.
 - 4) 한국 및 아세안 11개국 정상·외무장관 등 3,000명이 참석하여,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확대·발전·심화를 논의하였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행사로 세계 역사에 기록되는 쾌거를 이룩했다.⁵⁾”고 경찰은 평가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G20 정상회의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며, 대테러 종합훈련을 강화하였고,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 채널을 유지하며, 테러 첩보 수집·전파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테러 및 예상되는 위협에 대비하였다. 경찰은 중요 요인과 국가 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호경비 강화로 성공적으로 국제행사를 마쳤다.

당시 서울 G20 정상회의 폐막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부의 G20 정상회의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잘했다'는 의견이 50.0%, '매우 잘했다'는 의견이 21.6%로 나타나, 긍정평가가 71.6%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잘 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15.2%에 불과했다.⁶⁾ 이 여론조사는 정부의 G20 진행에 대한 평가여서 경찰의 역할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찰이 경호와 경비, 대테러 등 전반적인 활동을 전담한 결과인 점에 비추어보면, 경찰 역시 여론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만족할 만한 대응 역량을 발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회의 준비과정에서는 이에 대비한 세미나와 워크숍 등 활발한 학술활동이 전개된 반면, 국제회의를 끝마치고 난 뒤에는 이러한 성과에 대한 경찰의 주요 활동들이 단지 언론을 통한 성과 중심의 일회성 보도에 그쳤다.

국제회의를 대비한 경찰활동을 준비과정에서 계획수립과정, 단계별 실행과정, 그리고 행사 개최와 평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회의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들을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나, 중요자료들은 보안상 문제로 인해 자료 수집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5) 경찰청, 2011 경찰백서, 경찰청, 2011, 61면.

6) 리얼미터(www.realmeter.net)의 G20 정상회의를 평가한 2010. 11. 12 조사 자료임.

데 있어서 많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 개최 이후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회의를 대비한 경찰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 보다 더 광범위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구 결과물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진행될 것이며, 그동안의 축적된 성과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제회의를 대비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며 업그레이드된 성공과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서울 G20 정상회의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대비한 지금까지의 경찰의 대책과 대응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국제회의를 대비한 경찰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회의의 개념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먼저 국제회의에 대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⁷⁾의 제3조(정의)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제행사의 내용중,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을 말한다”에서와 같이,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범위를 국제회의라고 명시하고 있다.

7)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2. 6.29 기획재정부훈령 제102호).

국제회의의 종류는 광범위한 또는 특정문제에 대한 일반토의를 위한 토론장 (Forum)으로서 역할을 하는 회의, 각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비구속적 권고를 행하는 회의, 각국 정부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행하는 회의, 정부간 기구의 사무국 또는 각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도(Guidance) 또는 지시(Instruction) 의 결정을 내리는 회의, 조약문 또는 기타 정식 국제문서(instrument) 작성, 채택을 위한 회의, 국제적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 국제적 사업에 대한 자발적 분담금 보증회의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 G20 정상회의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 국제회의였다.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는 회의 결과로 서울 코뮈니케로 발표하였는데, 서울 코뮈니케에는 핵안보에 관한 중요 원칙들과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11개 주요 과제⁸⁾, 이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이 담겨있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국제회의중 주로 서울 G20 정상회의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2010년 1월 경찰청, 2010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각각 G20 경호경비 기획단을 발족하여 역대 국제행사 자료 분석, 국제회의 반대시위 분석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기본계획·종합치안대책·세부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하였다.⁹⁾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G20 치안대책위원회」와 경찰청 경비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G20 실무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경찰서장, 경비부대지휘관 등이 참석하는 「치안대책위원회」와 「실무대책위원회」를 운영

8) 서울 코뮈니케 내용은 ▲핵물질(고농축우라늄(HEU)·플루토늄)의 최소화 노력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시설의 보호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안보와 원자력안전간 상호관계 ▲핵감식, 핵 민감정보 보호, 핵안보문화 증진 ▲핵안보 관련 협약의 보편적 적용 확대 ▲IAEA 등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약체 활동 강화 등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실천조치들이 포함됐다.

9) 경찰청, 2011경찰백서, 62면.

하여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경찰서-기동대’까지 준비과정을 공유하고 내부적인 공감대 형성 및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다.¹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시에도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치안대책위원장으로 한 치안대책위원회, 실무대책위원회, 핵안보 경찰청 기획단 및 지방청 기획팀, 경찰작전본부, 경찰작전본부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국제회의에 대한 연구내용은 국제회의를 대비한 경찰활동으로 주요요인과 주요시설 경호경비활동, 대테러활동, 집회시위 대응활동, 그리고 기타 경찰활동으로 외사보안활동, 교통활동, 민생치안활동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국제회의에 대한 대비와 실제적인 경찰활동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국제회의를 대비한 경찰 관련 활동에 대한 연구 자료는 많지 않다.

먼저 선행연구로, 이선기의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현장활동단계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¹¹⁾는 부산 APEC 행사에 대해 경찰과 소방 등 4개 안전기관의 문제인식 차이 및 현장활동단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테러학회의 “G20 정상회의 대비한 테러예방 및 안전 확보”¹²⁾에서는 VIP 신변보호, 항공테러방지를 위한 보안활동,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위협 대비방안, 북한의 테러가능성 및 대비 전략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윤민우·신현기의 “G20 정상회담 대비

10) 위의 책. 63면.

11) 이선기,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현장활동단계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9호, 2009, 105-138면.

12) 한국테러학회, “G20 정상회의 대비한 테러예방 및 안전 확보”, 제5회 정기학술세미나 논문집, 2010,

주요 테러사건 비교분석과 이를 통한 대테러 대응방안 제시 : 각 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¹³⁾에서는 각 국의 폭탄테러 사례와 대테러 대응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G20 경호경비기획팀의 “국제회의 반대시위 및 대응 프로파일링”¹⁴⁾에서는 1999-2010년 국제회의 반대시위 주요 사례 및 경찰의 대응, 경호경비활동 관련 법과 제도를 다루고 있다. 서상열의 “요인테러의 위기관리 사례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¹⁵⁾은 요인테러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 경호안전활동 강화, 교육훈련 및 다양한 경호기법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동균과 신익주의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¹⁶⁾는 국제회의 및 스포츠행사에 대한 10년간의 테러대응사례 분석을 통해 전문가 양성과 자원 확보를 주장하였다.

최진태의 “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¹⁷⁾는 1968-2006년까지의 테러 유형별 분석을 통해 테러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시영의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대테러 무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¹⁸⁾에서는 대규모 테러단체의 대량살상무기와 첨단 과학장비로의 무장 및 이에 대한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대테러무기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정훈과 김태환의 “유럽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¹⁹⁾

13) 윤민우·신현기, G20 정상회담 대비 주요 테러사건 비교분석과 이를 통한 대테러 대응방안 제시 : 각 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치안정책연구소, 2011,

14) 서울지방경찰청 G20 경호경비기획팀, 국제회의 반대시위 및 대응 프로파일링, 서울지방경찰청, 2010.

15) 서상열, “요인테러의 위기관리 사례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235-259면.

16) 박동균·신익주,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161-179면.

17) 최진태, “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2008, 337-358면.

18) 최시영,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대테러 무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제3권 제1호(2010 여름호), 한국테러학회, 2010, 167-191면.

19) 권정훈·김태환, “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

은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테러방지법안 제정 및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조성제와 승재현의 “제3세계 국가의 테러방지법제정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사점”²⁰⁾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테러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행사 및 국가정보원의 대테러센터의 이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상열의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²¹⁾은 국제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제거, 지원자금 봉쇄, 테러 대응의 국제적 연대 강화 및 정부의 총괄적인 종합대책 강구를 주장하고 있다. 박준석의 “한국의 테러리즘의 대테러전략과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방안”²²⁾에서는 대테러대책에서 선진국형 대테러 통합센터 설립, 경호와 경비시스템의 정부주도형에서 민영화 전환 방안, 대테러방지법과 전문가 양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준석의 “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은 적극적인 테러예방홍보활동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권정훈의 “한국의 테러대응체제에 관한 연구”²³⁾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 테러대응 실태 분석을 통해 통합형 테러대응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오세연·김학범의 “테러의 위험성과 국가대응체제에 관한 연구”²⁴⁾는 테러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테러학회보 제3권 제1호(2010 여름호), 2010, 박용현의 “인터넷을 활용한 테러 대응의 법사회학적 접근 -예방 홍보 관리방안을 중심으로”²⁵⁾는 테

1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29-50면.

20) 조성제·승재현, “제3세계 국가의 테러방지법제정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9호, 2009, 274-283면.

21) 서상열,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경호경비연구 제9호, 2005, 99-131면.

22) 박준석, “한국의 테러리즘의 대테러전략과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195-214면.

23) 권정훈, “한국의 테러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4) 오세연·김학범, “테러의 위험성과 국가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제3권 제1호(2010 여름호), 2010, 83-113면.

25) 박용현, “인터넷을 활용한 테러 대응의 법사회학적 접근 -예방 홍보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2권 제3호, 한국 컴퓨터정보학회, 2007. 7, 225-234면.

러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으로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예방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국제회의 반대시위 사례와 테러, 다자간 국제회의시 현장활동단계의 역할과 중요성, 경호안전활동강화와 경호기법 개발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상회의에 대비한 테러대응 및 안전 확보, 적극적인 테러예방홍보활동, 요인테러에 대한 관련 법률과 향후 테러방지법안 제정,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대테러무기로의 활용방안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선진국형 통합 테러대응체제 구축, 유관기관과의 국내외적 연대 및 협력 강화, 경호와 경비시스템의 정부주도형에서 민영화 전환방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 결과를 통해 국제회의를 대비한 경찰활동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통해 국제회의 전후 경찰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현장에서의 경험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현장에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국제회의시 경호경비활동

1. 주요요인 경호경비활동

요인경호는 국가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요인에 대한 테러는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습격에 의한 대통령 암살미수사건, 1974년 8월 15일 조총련 문세광의 박정희대통령 저격미수사건과 육영수여사 저격, 북한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 1983년 미얀마 랭군 아웅산묘소 폭탄테러사건 등 주로 북한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00년 ASEM, 2005년 APEC,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때 각 국가의 정상들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국가정상과 정치지도자들은 국가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자간 국제회의 및 국제스포츠행사 등에 빈번히 참석하는 관계로 항상 테러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국가 정상이나 주요 정치지도자들을 공격대상으로 한 요인 테러는 세계적으로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지난 2007년 3월 22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라크 바그다드의 기자회견장에서 알카에다와 관련된 조직인 ‘이라크 이슬람국가’라는 테러조직에 의한 로켓포 공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만약에 국제회의 개최시 국가 정상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다면, 국가에 심각한 위기 및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

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는 25개국 정상 및 7개 국제기구 대표, 정부대표, 기자단 등 총 1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정상급 34명은 대통령 11명, 총리 11명, 주석 1명, 국제기구대표 7명, 유럽연합 2명(상임의장, 집행위원장), 기타 2명(대통령당선자, 왕자) 등이었다.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는 47여개국 정상²⁶⁾들, 4개 국제기구로 UN, IAEA, EU, Interpol 등의 대표 등 58명, 수행원 등을 포함한 1만여명의 사람들이 참가한 대규모 국제회의로 주요요인 경호경비의 대상 면에서 G20 정상회의 때보다 더 큰 규모였다.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경비는 위협 순위에 따라 A등급, B등급, C등급 등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현장 경호를 맡은 경찰은 회의장과 참가국가 정상들의 이동 동선에서 과격 시위와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호경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참가국 정상과 정치권 인사, 귀빈 등이 참석한 정상회의장인 코엑스 주변과 각국 정상들의 이동 동선에서 테러나 과격 시위의 위협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현장의 경호와 경비를 전담하는 경찰경호경비단을 가동하여, 최상의 경호·경비를 수행하였다. 경찰경호경비단에는 대테러 전문교육을 이수한 정예요원들로 구성된 경찰특공대를 비롯하여, 기동본부, 외빈경호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경비는 회의 및 정상 일정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수요소이다. 언론을 통해 이러한 일정이 공공연하게 보도될 경우 경호경비의 부담은 훨씬 가중되어진다.

두 국제회의 모두 주요요인에 대한 테러 위협이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요인에 대한 테러 사건이 주요시설대상에 대한 테러사건보

26) 아시아 16개국, 유럽 18개국, 아메리카 6개국, 아프리카 6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이 참석하였다.

다는 발생 빈도수가 낮은 편이나, 과급효과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점에서 국가 정상이나 주요요인에 대한 경호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요인테러의 유형으로는 총기류에 의한 저격, 폭탄테러, 독극물, 화생방 테러, 항공기 테러, 인질, 방화 등 여러 형태가 있으나 그 중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총기류에 의한 저격과 폭탄테러라고 할 수 있다.²⁷⁾ 물론 이러한 요인테러의 유형 그 어느 하나라도 대비에 있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국제회의시 주요요인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의 전문 경호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제정과 보완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2. 주요시설 경비활동

국제회의시 관련 주요시설에 대한 경호경비 대상은 정상회의 행사장을 비롯하여, 숙소, 공항, 그리고 이동경로시 중요건물과 도로 등 매우 광범위하다.

서울 G20 정상회의시 행사장은 코엑스(COEX)였고, 숙소는 서울 시내 특급호텔 12개소, 공항은 서울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리고 부대 행사장 등이 주요 경비대상지역이었다. 이러한 경비대상지역에 대한 경호 경비 내용은 경찰청이 발간한 ‘2011 경찰백서’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정상회의 회의장인 코엑스에 대해서는 3선경호원칙에 따라 경호경비가 이루어졌다. 테러 등 각종 위해요소에 대비하여, 회의장 주변에 기동

27) 서상열, “요인테러의 위기관리 사례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앞의 논문, 242-243면.

부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사전 안전활동을 전개하였다. 회의장 관련 시설 조성공사부터는 회의실 등에 대한 일반인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등 단계별로 경호안전을 강화하였다. 무역센터단지 내에 위치한 회의장은 아셈타워·현대백화점·호텔·도심공항 등 11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에는 대규모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으며, 삼성역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등 하루 평균 유동인구 약 20만 명, 상근자·입점 관련자 2만3천여명 등 약 23만명이 운집한 지역으로 경호경비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이들을 일괄 통제하기란 가능치가 않았다.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삼성역에서 지하철을 정차시키지 않고 통과시켰고, 주변건물 상근자 중심으로 관리하였다.

회의장 주변에는 전통담장형 방호벽·녹색펜스(메쉬펜스)·담쟁이 라인(안전 펜스) 등 새로운 방호시설을 개발하여 집회시위 등 경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하였다. 차량하부검색기·전기자전거(3륜차)·다목적 방패차량 등 다양한 장비를 개발하여 현장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²⁸⁾ 무역센터 내 상근자·입점 관련자와 회의장 주변 일정구역내 거주민의 통행편의를 위해 일명 ‘나들이 스티커’를 발부하여 검문검색 절차를 간소화하였다.²⁹⁾

정상들의 숙소인 12개 호텔에 안전구역을 건물 내부 전체와 승·하차 지점까지 확대 설정하여 경호안전을 확보하였다. 불필요한 출입문만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참가자·일반이용객·종사자로 구분하여 전용 출입구를 지정하여 인원·차량 통제선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서울공항은 주요 정상 전용기 출입국으로, 인천·김포공항은 전용기 또는 민항기 출입국으로 선정되어, 공항 경호경비는 출입국 안전 및 전용기 주기장 경비 등을 위해 군과 경찰이 책임 구역을 구분하여 경호경

28) 경찰청, 2011 경찰백서, 63-64면.

29) 위의 책, 64면.

비를 하였다. 특히, 인천·김포공항 터미널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MD·X-ray 검색 등이 불가능한 상태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청사·지하철 등에 근무자를 증원하고, 외곽 진입로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하여 인원·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하였다.³⁰⁾

리셉션 및 환영 만찬장(국립중앙박물관)은 행사 당일 임시휴관으로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고, 정상 도보 이동시 시야차단조명 설치를 통해 위해기도를 차단하였고, 환송 만찬장(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차량검문소와 직시고층건물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였다.

이동경로의 연도는 책임구역이 광범위하여 이에 대한 대비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연도 경호 근무자를 부대 편제화하여 운용하였다.

이처럼 서울 G20 정상회의 행사장과 그 주변, 숙소, 공항, 리셉션 및 환영 만찬장, 그리고 이동경로시 연도에 대한 경호경비는 경력 운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교적 계획대로 잘 수행되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 때의 경호경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대비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주요시설에 대한 경호경비가 이루어졌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회의장 역시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였으며, 숙소는 서울시내 특급호텔 10여곳, 그리고 공항은 인천, 김포, 서울공항 등 3개소로, 경호1등급의 경호가 이루어졌다. 회의장, 숙소와 공항 주변, 연도 등 모든 곳이 이전 서울 G20 정상회의의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그리고 지하철과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접한 상태여서 주요시설 경호경비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과도한 차량통행으로 안전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30) 위의 책.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함께 준비과정, 반복적인 대비훈련 등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개최는 불가능하였고, 효율적인 경호경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었다.

경찰은 경계강화, 을호 비상, 그리고 갑호비상에 이르기까지 초긴장상태의 치안활동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인 경호처, 국방부, 국정원, 소방방재청, 해경청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완벽한 임무 수행을 기하였다.

3. 국제회의시 경호경비활동 평가

서울 G20 정상회의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시 주요요인에 대한 경호경비활동은 철저하게 수행하였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정상급 34명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하여 경호하였고,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시에는 50여개국 정상 58명을 중점적으로 경호하였다. 위협 수준에 따라 주변 3강의 정상에 대한 A등급의 경호경비활동을 비롯하여, B등급인 분쟁지역 국가의 정상들, 그리고 C등급에 대한 경호경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경비에 있어 회의 및 정상 일정 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언론 취재 및 보도로 보안 유지에 어려움이 다소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일정이 노출된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경비활동이 더욱 정교화되고,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경호경비를 위한 경력운용면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표 1>에서와 같이 총 3만 6천여명으로, G20 정상회의시 4만 6천명 대비 27.2% 경력을 감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력운용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표 1〉 국제회의시 경력운용 비교

국제회의명	ASEM(2000)	APEC(2005)	G20(2010)	G50(2012)
총 경력	29,590	28,666	45,956	36,000

국제회의시 대부분 주요시설 경호경비는 <표 2>에서와 같이 회의장과 정상 만찬장, 숙소, 공항, 공식 배우자 행사장, 개별행사장, 공식행사시 기동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경호1등급에서 경호5등급까지 구분하였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1선 경호안전지역에서 3선과 3-1선 경호안전지역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대내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경호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행사장과 그 주변은 철저히 경호경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만, 행사장에 비해 정상들의 숙소인 호텔 등은 종사자와 이용객들로 상대적으로 다소 취약하였다.

〈표 2〉 경찰특공대 주요시설 배치

장소	계	회의장	숙소	공항	배우자	문화	기동로	기타
G50	322	87	129	20	29	12	10	25

서울 G20 정상회의시에도 경찰특공대 323명을 위의 시설에 비슷하게 배치 운용하였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시 행사장 경호경비는 1선(담장형펜스), 2선(녹색펜스), 3-1선(다목적 바리케이드, RF-gate) 등 단계적 방호시설 운영하였고, 행사장에 경찰 4,500여명과 3개 기동대 투입, 외곽에 85개 부대를 배치하였다. 회의장 내외곽에 100여명의 경찰특공대를 배치하였고, 장갑차·폭발물처리 트레일러 등을 운용하였다.³¹⁾ 행사장 출입구역에는

MD, X-ray, RFID, 차량하부검색기 등 경호장비를 운영하였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시 3-1선 RF-gate 운영, 거주민 검문검색 최소화, 그리고 나들이 스티커 소지자는 게이트 통과만으로 검문검색을 대체한 점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시행된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시에는 3개 경찰관기동대 규모로 전담부대를 편성하여 운용하여 경호경비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1선 경호안전지역인 회의장을 중심으로 내외곽과 인접도로, 지하상가와 지하철 등을 2선, 3선 경호안전지역으로 설정하여 통제하였다. 출입 통제로 주변 상인과 주민의 불편을 다소 초래되었다. 그러나 단계별 회의장 통제로 통제 구역 및 기간을 최소화하여, 정상회의 당일인 3.25 0시를 기해 코엑스 회의장을 통제하였고, 3.26일 0시부터 무역센터 단지를 통제한 점도 시민들도 불편을 감수하고 경찰을 돕게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서울 G20 정상회의 때와 같이 통제구역 자전거 순찰을 비롯하여, 담장형 펜스 설치로 회의장 주변 미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위압감을 감소시키고, 오히려 정상회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은 행사장 시설의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함께 위험물질 및 폭발물 관리에 치중한 결과 직접적인 테러 위협이나 시도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이 경찰의 치안역량을 통해 치안 안전국가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중대사인 정상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경호경비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출입 통제는 불편을 최소화

31) 경찰청, “핵안보정상회의 성과보고”, 경찰청, 2012, 1면.

하였다고 할 지라도 통제지역 주민의 불편을 야기한 건 사실이다. 여기에 일시적이었지만 교통통제시간이 길어지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반대 집회시위까지 발생해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테러예방을 위한 장비들과 경찰복을 입은 많은 경찰들이 회의장 주변 곳곳에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앞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Ⅲ. 국제회의시 대테러활동과 집회시위 관리

1. 경찰의 대테러활동

경찰의 대테러활동은 주요 요인과 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이다. 국제회의시 테러는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정상이나 주요요인을 공격하여 제거할 목적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의 개최 목적 자체를 반대하여 국제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다.

9·11 테러 이후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에 대한 대응전략을 소극적인 반테러(anti-terrorism)에서 적극적인 대테러(counter-terrorism)로 변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³²⁾

대테러활동은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정부, 경찰, 군대 및 정보기관 등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테러리즘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리즘 혐의자의 관리, 테러리즘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리즘 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³³⁾

한국이 테러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느냐는 한 조사의 질문에 시민들은 테러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³⁴⁾ 그러나 국제회의

32) 이상원, “counter-terrorism에 있어서 경찰의 전문화 방향”, 대테러연구 제31집, 경찰청, 2008, 193면.

33) 정우일,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9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9, 190면.

34) 오세연·김학범, 앞의 논문, 83면.

가 개최되면 테러의 위협 가능성은 증대된다. 1990년 이후 대규모 국제 회의가 테러와 폭력적인 반대시위로 국제회의 개최의 의의가 퇴색된 경우가 많았다.

<표 3>은 테러정보통합센터(www.tiic.go.kr)에서 제공한 2003년에서 2012년 7월까지 발생한 세계테러사건 통계자료이며, <표 4>는 테러유형별 사건 통계자료이다.

<표 3> 연도별 세계테러사건 추이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사건	744	988	1,896	2,886	3,427	3,215	3,370	2,946	3,347	1,582	18,358

출처: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세계테러사건(2003~2012. 07) 통계자료임

<표 4> 테러유형별 사건

납치	60	방화	6
암살	19	무장공격	728
폭파	749	기타	20
계	1,582		

출처: 테러정보통합센터의 테러유형별 사건(2012. 01~2012. 07)

국제회의시 경찰의 대테러활동은 경찰특공대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경찰특공대는 테러사건 예방·저지, 폭발물 탐색·처리, 국가 중요행사 안전활동, 중요범죄 예방·진압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대테러사건과 총기인질사건 진압, 기타 요인 경호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특공대는 서울 경찰특공대 외에 부산, 대구, 인천 등 6개 지방경찰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표 5>는 경찰특공대의 출동 현황 자료이다.

<표 5> 경찰특공대 출동 현황

(단위 : 횟수)

구 분	계	인 질	요 인 경 호	테 러 위 협	전 진 배 치	안 전 점 검	적 응 훈 련	합 동 훈 련	기 타
'08년	2,864	5	843	38	567	708	130	137	436
'09년	2,678	7	407	44	800	736	197	148	339
'10년	4,735	3	417	42	858	2,671	131	218	395
'11. 10월	2,679	2	243	47	506	1,302	102	111	366

※ '11년 폭파·협박 등 26건 발생하여 11건 12명 검거

경찰특공대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개인전으로 장애물극복, 사격, 레펠, 인질구출 등 개인 능력 평가(전술)를, 단체전에서는 저격, 장애물극복, 통로개척, 사격 등 팀별 능력 평가(전술)와 함께 차량 내 폭발물 탐지, 물포 이용, 폭발물 처리(폭파·탐지) 등으로, 진압작전, 폭발물처리 등 실제작전 과정과 유사한 종목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전술, 저격수, 폭발물 처리, 탐지전 운용요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서울 핵안보정상회담을 앞두고 2월에 실시된 경찰청과 ITOT A³⁵⁾가 공동 주최한 '국제 대테러 컨퍼런스'에서는 군·해경 대테러부대 요원 등 1000명이 참석하여, 선진 대테러전술을 수용하고, 대테러부대의 국제화·전문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주요 주제로 대테러 지휘와 리더십, 지휘통제, 전술지휘소 운영, 인간정보전지휘, 견프로그램 및 통합공격, IED 집중공격 대응, 지휘통제, 인질구출, 저격작전 지휘 및 훈련, 통로개척 역량 및 전략, 근접전 다중통로개척포인트, 해상작전, EOD 통합공격 대응, 전술피해 관리 등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참석한 경찰특공대원들은

35) ITOTA(International Tactical Officers Training Association, 국제전술경찰훈련협회)는 대테러전술·장비정보 교류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관련 경찰관·특수부대원 등 주로 유럽·미국 38,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로 회장은 케빈 바렛이 맡고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특히 비상사태를 대비한 인질구출과 근접전 다중통로개척과 관련한 임무 수행에 큰 관심을 갖고 집중하였다.

경찰은 정상회의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며, 회의 기간동안 대테러활동을 위해 특공대, 기동대, 전·의경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경찰은 국제회의시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시설별·등급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또한, 항공기 등 주요 시설물 폭파 협박에 대비하여 항공 관련 시설물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예상되는 테러위협집단으로 북한, 이슬람 과격집단,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및 국내단체 등³⁶⁾이 제기되었으나, 실제 G20 정상회의기간 동안 국내에서 정상회의를 방해할 만한 테러 위협과 기도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신종 항공테러 위협이나, 지하철 등에 대한 폭발물테러, 우편물 폭발테러 등 다양한 테러 유형별에 따른 대비가 요구되어진다.

<표 6>에서와 같이 테러는 군·경과 관련시설, 민간인과 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중요인물, 교통수단 등 다양하다. 테러에 있어 주요인보다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이 더 높다.

<표 6> 테러대상별 사건

외국인·시설	117	국가중요시설	119
중요인물	48	군·경(관련시설)	620
다중이용시설	58	교통수단	20
민간·시설(기타)	600	계	1,582
계	1,263		

출처: 테러정보통합센터의 테러대상사건 통계(2012. 01 ~ 2012. 07)

36) 이선기, “G20 정상회의시 안전대책방안 : VIP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2010년도 한국테러학회 제5회 정기학술세미나 논문집, 한국테러학회, 2010, 30-38면.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는 행사장에 폭발물 등의 설치, 주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설치, 휴대용 폭발물 이동, 그리고 주변 건물 화재나 주유소 폭발, 지하철 폭탄 테러 등 여러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숙소를 향한 총격과 폭발물의 위험은 항상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실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동안 경찰특공대의 배치면에서 회의장엔 87명이 집중 배치된 반면, 숙소에는 129명이 분산 배치되었다. 주요 시설 경호경비는 폭발물에 의한 공격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탄 테러가 일어난다면, 정상회의의 진행 자체는 물론이고,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국가 중요시설과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경호경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시 총포·화약류 및 위험물 등 단계별 안전관리로 개인소지 총기류 일체점검·영치 및 취급업소 2,42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주요 취약시설 목표 분석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중요시설 456개소, 다중이용시설 1,28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였고,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경력배치 및 주요 행사장에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하였다.

다중이용시설중 서울역, 부산역 등 지하철역사를 중심으로 시설 내외부의 상가 등 밀집장소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하철은 G20과 G50 개최장소인 삼성역을 중점적으로 테러시 혼란과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하철 경찰대를 중심으로 역내 승강장, 환승통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순찰과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대

응에 주력하여야 한다. 지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시 전국 548개 역사 및 터미널에 경찰관 3,523명이 근무하였다. 이 시기에 테러 관련 신고 총 38건(폭과협박 7, 의심신고 31)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였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및 화재 등을 대비한 매뉴얼은 안전사고 및 화재 등 재난 대비에 치중하여 있고, 테러예방 및 테러발생시 조치요령 숙지상태는 미흡한 편이다.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상황에 따른 업무 매뉴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처럼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시 경찰특공대의 완벽한 임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특공대의 편제는 국내외의 테러위협 증가 추세에 맞게 확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찰특공대의 장비에 대해서도 보완 강화하여야 한다. 북한 및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단체에서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재래식 무기에서 화학·생물학 무기 및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고도의 첨단 과학장비를 기반으로 한 통신·전자장비, 관측장비, 스텔스 잠수함, 최첨단 탄약 등으로 무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³⁷⁾

이에 대해, 국내 대테러 무기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첨단무기체계로는 고출력 마이크로파(HPM) 무기, 무인잠수정(UUV), 음향탄(Sonic Bullets), 탄소섬유탄, 고섬광 발생탄 등을 제시하였다.³⁸⁾

또한 테러장비가 고전적 개념이나 폭탄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면서 보호되고 있는 비행기, 주유소 및 기름, LPG 운반차량 등 시설이나 장비로써 그 지배권만 탈취하면 기존 장비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³⁹⁾

서울 G20 정상회의시 경찰의 장비는 검색·통제·기동·통신장비 등 총

37) 최시영, 앞의 논문, 186면.

38) 위의 논문, 187면.

39) 박용현, 앞의 논문, 227면.

32종 41,657점을 수급·운용하였다. 특히, 차량하부검색기, 담장형 분리대, 담쟁이 라인, 다목적 철제 바리케이드, 다목적 방패차량, 무선전송 열영상 카메라, 전기삼륜 순찰차, 지하철 차단시설 등 다양한 장비를 개발·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⁴⁰⁾

경찰은 테러 사전진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의 대테러 장비를 <표 7>과 같이 보강하고 있으며, 서울 G20 정상회의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시 첨단 장비를 동원하였다.

<표 7> 경찰특공대의 장비현황

구 분	보 유 량	주요장비내역
총 계	101종 8,534점	
무기류	10종 1,757점	MP-5기관단총, P7권총, 저격총 등
안전보호장비	18종 2,946점	특수방호복, 방탄방패 등
작전장비	23종 943점	다목적공구, 전파교란기, 협상킷 등
검색관찰장비	35종 1,998점	금속탐지기, 야간조준경, 전자내시경 등
기동장비	8종 86점	경호용 서버밴, 장갑차, 탐지견수송차 등
정보통신장비	2종 749점	헤드폰, 휴대용무전기 등
기타장비	5종 55점	총기크리너 등

* 2011년 11월 기준 자료임

경찰특공대의 테러 진압훈련에서는 40킬로그램짜리 특수 방탄처리복을 입고, 또한 로봇 등 첨단장비를 경호·경비에 동원하였다. 원격 로봇

40) 서울지방경찰청 G20 경호경비기획팀, 국제회의 반대시위 및 대응 프로파일링 - 반대시위 세력·양상·경찰대응·관련 법제도 중심으로, 서울지방경찰청, 2010, 70면.

과 함께 일본제 탐색용 디지털 내시경도 보강되었다. 또한 전파교란기도 도입하여, 무선으로 작동하는 사제폭발물을 반경 30미터 내의 20~2천5백 메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를 차단하여 무력화하였다.

테러에 대비한 최첨단 장비의 보강은 테러 위협을 감소시키고, 테러 대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테러범의 테러 무기를 사전에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계속 대테러 첨단장비와 무기체계는 개발되고 보강되어야 한다.

나아가 경찰이 테러대응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령 제정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테러의 규정, 테러의 목적, 테러 행위, 테러 유형의 죄 등 테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표 8>에서와 같이 테러사건유형에 따른 책임기관이 다양한데, 경찰이 테러범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8> 테러사건 유형별 책임기관

테러유형	관할기관	테러유형	관할기관
국내 일반 테러	경찰청	방사능 테러	교육과학기술부
항공기 테러	국토해양부	화학 테러	환경부
해상 테러	해양경찰청	생물 테러	보건복지부
국외 테러	외교통상부	군사시설 테러	국방부

테러대응을 위한 법 제정의 사례로, 서울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당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경호안전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경호안전특별법은 세계 주요 정상들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및 폭력시위 차단을 위해 G20 회담 경호업무 수행의 우선적인 법 적용, 대통령 경호처장이 단장이 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 정상회의 관련 지역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호안전구역 지정,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과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 9조 4항에는 “테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은 통제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테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고 해 군과 경찰의 동원과 배치 장비 운용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경호안전특별법은 G20 회담이 끝나는 11월15일까지 적용되었던 한시적인 특별법이었다.

앞으로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시, 테러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며, 경찰의 대테러활동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집회시위 관리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동안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행사기간 중 반핵단체 및 해외단체와 연대하여 반대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각종 이익단체들도 행사를 전후하여 요구사항을 이슈화하기 위해 행사장 주변에서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치안부담이 가중되었다.

지난 1~4차 G20 정상회의시 극렬시위가 전개되었고, 국내에서도 G20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연합하여 ‘G20 대응 민중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등 G20 기간 중 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시위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9>와 <표 10>⁴¹⁾은 1~4차 G20 정상회의 시위 상황 및 경찰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표 9> 제4차 토론토 G20 반대집회시위 현황

일시	장소	인원	집회·시위 내용
6. 24	퀸즈파크→ 알렌가든	2,200명 (행진 600명)	‘원주민 권리 주장 집회 및 행진’
6. 25	토론토 도심지역	2,000명	‘토론토 공동체 행동의 날’ 투쟁 ※ 시내 곳곳에서 도로행진·피켓팅·구호제창·퍼포먼스 등 진행
6. 26	퀸즈파크→ 행사장 방면	1만여명	‘캐나다 G20 정상회의’ 반대집회 ·순찰차량(6대) 방화, 주차차량과 주변 은행 및 상가 유리창 등 손괴 ·시위양상 과격화에 따라 해산 시도, 1,057여명 체포

제4차 G20 토론토 정상회의시 경찰은 반대집회시위에 대해 행사장 방어(지역방어)를 위주의 경력운용 및 초기 과격시위자 미 검거 등 온정적인 대응, 시위대 검거시 지휘부의 지시가 아닌 경찰관의 개별적 법집행으로 검거, 그리고 정확한 채증에 의한 과격시위자 검거보다는 체포 후 소지품 검사를 통해 시위자를 선별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위 당시 정상숙소가 공격을 받아 유리창이 파손되었다.

41) 위의 책, 55면.

<표 10> 1~3차 G20 정상회의 시위상황 및 경찰활동

	워싱턴 정상회의 (08.11.15~11.16)	런던 정상회의 (09.4.2~4.3)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24~9.25)
주요 의제	·글로벌경제위기해결 ·자유주의체제재확립	·재정확대등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주의저지/개도국 자 금지원	·국제금융기구·금융규제 개선 ·세계경제, 기후변화 등
경찰 병력	워싱턴경찰 2000여명	3000여명 시내 배치 최대 6000명 동원계획	경찰 5000명 배치 최대 7000명 동원 계획
대비 활동	·회의장 주변 폐쇄 ·전철역 무정차통과 ·테러대비 가방 검색 ·기자단 안전구역설정	·경찰병력 일원화 ·테이저건 사용 허용 ·3000여대 감시카메라 설치 ·주변도로와 다리 폐쇄 ·주변역3곳 무정차통과 ·회의장주변 0.8Km 통제 펜스 설치	·평화시위 허용구역 설정 ·시위대연행·구금장소확보 → 경미범죄자 훈방조치 ·출퇴근차량 도심진입통제 ·회의장주변 3단계 구분 통 제 ·회의장주변 0.8Km 4m높이 철제벽 설치
경찰 장비			·음향대포(LRAD) ·빈백탄(Bean bag)
시위 상황	·악천후로 시위대급감 ·노숙자 무료급식행사 등 평화적 집회시위 ·체포 및 연행 없음	·참가인원 4만여명추정 ·G20 벨트다운 시위주도 ·습격목표 138곳 적시·회 람 ※ 금융기관, 에너지업체 등을 타겟 ·평화시위 → 폭력시위 ·111명 체포(연행미포함), 1명사망	·참가인원 1만여명 추정 ·“G20 저항프로젝트” 시위 주도 ·습격목표100곳 적시·경고 ·소규모 시위대, 게릴라식 시위 ·평화시위 → 폭력시위 ·190명 체포(연행 미포함)
경찰 대응	·시위대 관리 수준	·『토끼몰이』 전략 시위종료시까지 물·화장 실 등 접근불허(통제선 이탈 불허) ·통제선 이탈시 이름·주소 기재 및 사진촬영▶거부 시 이탈 불허	·시위확산전 사전진압대응 ·시위전 모의단계시 기습 체 포 ·트위터 이용해 경찰진압진 로 전파한 자 ▶ 통신기기의 범죄목적 사용으로 기소

경찰은 제4차 G20 개최지였던 토론토를 방문한 실사 결과를 참고하여, 서울 G20 정상회의의 계획과 대책을 분야별로 세밀하게 작성하여 실행하였다.

경찰은 그동안 ‘합법촉진·불법필벌’의 범질서 확립 기초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찰청장부처 일선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노동·농민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농민연합과 ‘푸른 농촌 희망찾기’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등 G20 반대 분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각종 단체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설득으로 다수 단체가 ‘G20 반대투쟁 불참’ 방침을 확정하고 민주노총 등도 노동자대회를 G20 기간을 피해 개최하도록 하여 실제 행사기간 중에는 참가인원이 대폭 감소(최대 5만여명 → 3,500명) 하였다.⁴²⁾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시 집회시위는 민중의 힘이 2012. 3. 25일 서울역광장에 3천명이 참석하여 「민중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찰은 합법촉진 활동을 통해 참여인원을 대폭 축소시켰고, 장소도 서울광장에서 서울역으로 변경케 하였으며, 불법 가두시위는 철저히 차단하였다. 환경운동가 등 ‘1인시위·피켓팅’ 16건(코엑스 주변 11건)도 특이사항 없이 진행되었다.

정상회의기간동안 안전한 진행을 위한 필수장소 위주의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안전구역 주변에 별도의 집회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42) 경찰청, 2011 경찰백서, 66면.

3. 대테러활동과 집회시위 관리 평가

경찰의 대테러 예방활동을 통해 G20과 G50 정상회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테러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테러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를 비롯하여, 이슬람의 과격테러분자에 대한 사전 첩보 수집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참가국 정상에 대한 위협이나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이 경찰의 테러예방활동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을 낮게 보았음에도 테러예방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해외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소말리아 해상에서의 해상납치 등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고 느끼는 두려움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테러 위협을 제거하고, 테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테러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효율적인 테러예방 홍보의 관리는 긴밀한 시민의 정보제공에 대한 협력이 대테러에서는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의 비합리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함께 테러정보를 개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경찰은 정보서비스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테러정세 및 동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한 테러예방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정상회의시 경찰이 시행한 ‘테러 범죄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는 테러 발생 개연성에 따른 조치로, 테러예방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경찰은 신고보상금과 별도로 국제 테러단체 조직원 또는 테러 기도자를 검거하거나 테러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에 대해 경감까지 특진시키며 대테러 사

전 안전활동을 독려한 점도 테러 대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서는,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상회의 취지를 설명하며 합법촉진활동을 전개한 결과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G20기간 중 개최된 ‘전국 노동자대회’(11.7, 2만명), ‘G20규탄, 국제민중 공동행동의 날 집회’(11.11, 3,500명)를 폭력행위 없는 준법·평화 집회로 관리함으로써 과거 ‘과격폭력시위 공화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집회관리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⁴³⁾

해외 경찰주재관 등을 통해 과격시위 전력이 있는 해외 NGO단체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폭력시위자의 입국을 사전에 규제하여, 국제연대 반대시위 확산을 예방하였으나,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상설 기동부대를 대상으로 행사장·도심권 주요 장소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경호경비대상지역에서의 집회시위를 차단하였다.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유연한 집회시위 대처로 헌법적 권리보장과 경비와의 조화를 모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호경비구역 내에서는 집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집회시위는 단호히 법에 따른 대처가 이루어졌다. ‘명분없는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 법집행은 당연’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냄으로써, 반대단체의 불법 심리를 억제하였다고 평가된다.

43) 위의 책.

IV. 국제회의시 기타 경찰활동

1. 외사보안활동

국제회의시 경찰의 외사보안활동은 주요 요인 방한시 테러 등 각종 위해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하여, 정상회의 기간 중 우발사태를 대비함으로써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도모하고 있다.

경찰은 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 주최측과 사전 협조, 행사장 및 숙소 주변 각종 위해요소 사전 제거, 행사관련 위해정보 수집 및 신원특이 외국인 특이동향 파악, 그리고 행사상황 파악 등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외사보안활동 사항으로 행사상황 파악을 위해 관할 지방경찰청·경찰서에서는 국제행사의 일정·규모·참관 외국인 등에 대한 사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행사장·숙소 주변 외사보안 활동으로는 외빈숙소·행사장·장기투숙객·출입외국인 명단 등 사전확인 및 신원특이 외국인의 행사장 접근 차단을 하고 있다. 테러·불법시위 등 위해행위 첩보수집 활동으로는 국제공항·행사장·숙소 주변 및 외빈 이동로상 관련 단체의 불법집회, 돌발행위 등 첩보수집, 외사동향관찰 대상자, 테러지원 국가인 등 신원특이 외국인의 특이동향 유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동향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의 대테러활동 핵심사항중 하나는 테러정보 수집이다. 경찰은 외사보안활동을 통하여 테러정보 수집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국내외 테러정세와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국내외 테러징후현상이나 국제테러분자의 국내 잠입 등 테러관련 첩보를 다각도로 수집하여야

한다. 경찰은 의심되는 테러 첩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사,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정보를 수집·조사·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⁴⁴⁾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경찰은 대내외 테러 첩보와 정보 입수, 내사, 검거에 이르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사, 경비(대테러) 등 유관기능을 비롯하여, 대내외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 광범위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국의 정보기관과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FBI, CIA 등 외국 정보·수사기관과의 공조활동은 물론 국제회의 참가국의 국내 상주공관 보안담당자들과 정보교류 활동 및 해외정보주재관, 경찰주재관의 인터폴을 통한 국제 테러정보수집에도 주력하여야 하며, 국제 테러협약자의 리스트를 사전에 확보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여야 한다.⁴⁵⁾

경찰은 국제 공해항 의사보안 활동 강화 및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 공해항 관할 지방경찰청에서는 행사참가자·신원특이 외국인 등 출입국 상황 파악, 행사참가자에 대한 출입국 관련 관계기관과 협조, 제반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안보위해 우려자에 대한 입국 차단과 항공테러 예방을 위한 보안검색 등 국제공항만에 대해 의사보안 활동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의사상황반 운영으로 공항만 이용 국내외 VIP와 관련된 정보 수집, 외국 국민 등 주요인사 방한시 경호용 총기 관련 유관기관 협조,

44) 박준석, “테러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7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168면.

45) 이선기,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현장활동단계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127면.

공항만 경비경찰과 협조체제 유지, 공항만內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2. 교통활동

서울 G20 정상회의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모두 회의장이 코엑스로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되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 당시 승용차 도심 주행속도가 16km/h에 불과하여 교통대책이 필요하였다.

경찰은 일정별 제대 이동상황을 1초 단위로 전자지도에 표출, 모의주행을 통한 CPX(3회)와 실전과 동일한 FTX(12회)를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보완하여 교통경찰의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서울 G20 정상회의행사 당일에는 행사장 및 이동로 주변 교통정체에 대비해 예비 모터케이드(40대)를 활용하여 주 이동로 순회 순찰을 실시하였고, 경찰·민간 견인차(80대)를 이동로 취약구간에 집중 배치하였다.⁴⁶⁾

COEX 등 행사장 주변에 교통관리요원 1,843명(경찰 1,358, 모범운전자 485)을 집중 배치하고, 입간판·플래카드(1,072개) 설치하는 물론, 교통방송 및 DMB 등 IT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소통을 확보함으로써 총 378회에 걸친 연도 교통관리를 수행하였다.⁴⁷⁾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자율 차량2부제·승용차량 없는 날 시행(참여율 64.8%, 서울시내 전역 6.4%, 강남권 9.4% 교통량 감소), 관공서·민간기업체 등 출근시차제, 강남 4개구 유치원, 초·중·고교 지연 등교 및 야간 학원수업시간 단축운영 등 교통량 감소 대책을 시행하였다.

46) 경찰청, 2011 경찰백서, 68면.

47) 위의 책.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참가정상이 G20의 두배이며, 강북권 숙소 체류 정상이 28국에 달해, 교통관리가 더 힘들었다. 58개 정상제대, 공식 및 개별행사 완벽 이동관리, 공식행사(5), 정상회담(19), 개별행사(327) 등 총 806건의 정상제대를 이동 관리하였다. 실시간 영상전송 가능한 헬기와 GPS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교통관리를 하였다. 경찰헬기 7대(총 25회 45시간)를 운영하여, 실시간 이동상황을 상황실에서 파악하고 관리하였다. 경호 및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모터싸이클 · 순찰차로 구성된 차량 제대인 대규모 모터케이드를 구성하고 지방 및 OB요원 103명을 충원하였다.⁴⁸⁾

개별 행사시에는 위해도별 경호수준을 조정하여, 교통통제를 최소화하고, 58명 정상들의 정상회담 · 개별행사 등 460건에 대해 원활한 교통관리를 하였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입출국 113건, 정상회담 19건, 개별행사 327건으로 G20 대비 102%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심관 및 행사장 주변도로 외 여타지역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졌다. 또한 자율 차량 2부제가 아닌 자가용 이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홍보한 결과 당시 2부제 참여율은 61.5%였으며, 서울시 교통량은 4.9%, 강남지역은 11.1%로 감소되었다.

경찰의 교통대책은 정상회의기간동안 시민들의 불평과 비난의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이었으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행사장 주변 통행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덕택에 교통소통이 잘 이루어진 편이다. 몇 번의 국제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다 더 성숙해진 시민의식의 결과로 보여진다.

3. 민생치안활동

48) 경찰청, “핵안보정상회의 성과보고”, 3면.

지역경찰 경력이 국제회의 당시 경호경비에 대규모로 동원됨에 따라 행사기간 중 민생치안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곤 하였다.

경찰은 국민의 민생치안 우려를 해소시키고자, G20에는 지역경찰 근무체제를 전국 지구대·파출소 총 1,940개소 중 1,850개소를 2부제로 전환하였다. 민생치안을 위해 자율방범대 9,423명, 경찰대학생 등 교육생 548명, 경우회 1,199명, 경비원 498명, 생활안전협의회 2,510명, 기타 단체 2,412명 등을 민생치안 보조인력으로 투입하여, 치안역량을 보강(일 평균 16,592명)하였다.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민생치안을 유지하여, 일 평균 5대범죄 발생 89건(5.8%) 감소, 일 평균 112신고 건수 205건(0.9%) 감소의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동안 역시 비상근무와 지역경찰 2부제가 시행되었고, 평상시와 같은 민생치안이 이루어졌다. 자율대원 등 협력치안을 위한 인력을 민생치안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였다. 정상회의 기간 112 신고건수는 작년 3월 평균 대비 3,186건으로 11.7%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정상회의 기간동안 막대한 경력 동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상회의로 말미암은 치안 공백과 민생치안에 대한 우려를 차단한 실질적인 성과였다고 평가된다.

V. 결론

경찰은 국제회의기간 정상들의 안전과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였고, 최첨단 대테러 및 보안장비까지 동원해 대비하였다.

국제회의에 대비한 경찰활동은 전체 관련부서의 상호유기적인 협력 및 강화를 통해서만 완벽한 경비활동이 가능하다. 관련 부서중 어느 한 곳이라도 소홀한 틈이 생기면 이로 인한 전체 경찰활동의 임무 수행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국제회의를 대비한 경찰의 철저한 전체 계획 수립과 함께 대비과정에서 철저한 분담 및 유기적인 상호 협력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찰은 서울 G20 정상회의와 G50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비해 경호경비활동, 테러 예방과 차단 등의 대테러활동, 집회시위 관리, 테러 첩보와 정보 수집 등의 외사보안활동, 민생치안활동, 그리고 교통활동을 비롯한 총체적인 치안체제 구축의 경찰활동을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은 이처럼 국가정상과 국가 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경찰활동과 철저한 대비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준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체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비교적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국제회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 토대 위에서 사전 정보 수집과 비교분석, 기본 방침과 추진 체계, 그리고 분야별 치안대책으로 정상들 경호경비, 행사장·숙소·공항·연도 경호경비대책, 대테러대책, 집회시위대책, 교통관리대책, 민생

치안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대책과 행정 사항이 잘 협조되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경력 운용면에서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이전 서울 G20 정상회의보다 더 큰 규모의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경력으로 충분히 치루었다는 점은 그 성과를 높이 살만하다.

국제회의를 대비하는 경찰의 입장은 우선적으로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석한 정상들의 안전 제일주의이다. 이를 위한 분야별 경호경비 및 대테러 예방활동은 전반적으로 세운 계획과 대책대로 철저하게 수행되었고,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국제회의를 대비한 전문적인 경찰활동에 있어 충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한 점은 이후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특히 테러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법령에 따른 업무영역의 명확성을 기하고 대테러 대응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정에 있어 경찰이 국내외 중요 국제행사 및 귀빈 해외순방시 대테러 활동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이 반영되어야 하며, 경찰이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국제회의를 대비한 경찰활동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정과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회의시 주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테러의 직접적인 피해대상인 국민들은 테러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테러 관련 입법 개정을 통한 테러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각 지방청별 단위의 경찰특공대의 편제 및 운영은 국내외의 테러 위협 증가 추세로 볼 때,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인적 자원의 지속적인 충원과 함께 훈련과 교육, 그리고 충분한 예산 지원 및 첨단장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국제회의시 경호경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현장근무자들의 책임감있고 적극적인 근무자세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과 사기진작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능별 '현장점검팀' 운용을 통해 자체 사고 예방과 함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총체적인 경찰활동은 이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고, 국제회의를 대비한 경찰활동의 확인된 좋은 모델로 정립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국제회의를 대비한 경찰활동의 발전적인 역할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영규 외 공저, 경찰경비론, 경찰대학, 2011.
- 경찰청, 2011 경찰백서, 경찰청, 2011.
- , 2010 경찰백서, 경찰청, 2010.
- , 2011년 주요 업무계획, 경찰청, 2011.
- , 선진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국민 토론회, 경찰청, 2011.
- , OECD 등 주요 외국의 불법집회·시위 대응 현황 자료집, 경찰청, 2009.
- 경찰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운용 매뉴얼, 경찰청, 2011.
- 미디어리서치, 선진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 경찰청, 2011.
- 문경환·황규인, 경찰정보론, 경찰대학, 2011.
- 박경래·황정인·박노섭·안정민,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대응 기준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부산지방항공청, 부산 APEC 정상회의 안전한 하늘길을 열다, 부산지방항공청, 2005.
- 서울지방경찰청 G20 경호경비기획팀, 국제회의 반대시위 및 대응 플과 일링, 서울지방경찰청, 2010.

서정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9.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2, 치안정책연구소, 2011.

한국경찰법학회·경찰청, 집회·시위자유의 법적 문제와 합리적 대안, 한국경찰법학회·경찰청, 2008.

한국테러학회, G20 정상회의 대비한 테러예방 및 안전 확보, 제5회 정기학술세미나 논문집, 2010.

2. 논문 및 기타

경찰대학, “G20 집회시위 관리정책 평가 심포지움”, 경찰대학, 2011.

경찰청, “핵안보정상회의 성과보고”, 경찰청, 2012.

권정훈·김태환, “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29-50면.

권정훈, “한국의 테러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택수·이성용, “외국의 집회·시위 관리시 물리력 사용에 관한 규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25호, 치안정책연구소, 2009.

박노섭, 선진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경찰력 행사기준,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토론회, 경찰청, 2011

박동균·신익주,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161-179면.

박용현, “인터넷을 활용한 테러 대응의 법사회학적 접근 -예방 홍보 관

- 리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2권 제3호, 한국 컴퓨터정보학회, 2007. 7, 225-234면.
- 박준석, “한국의 테러리즘의 대테러전략과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195-214면.
- 박준석, “테러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7호, 2008, 157-172면.
- 서상열,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경호경비연구 제9호, 2005, 99-131면
- 서상열, “요인테러의 위기관리 사례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235-259면.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 G20 정상회의 종합상황 분석보고회의”, 서울지방경찰청, 2010.
- 오세연·김학범, 테러의 위험성과 국가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제3권 제1호, 2010 여름호, 83-113면.
- 이상원, “counter-terrorism에 있어서 경찰의 전문화 방향”, 대테러연구 제31집, 경찰청, 2008, 193면.
- 이선기,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현장활동단계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9호, 2009, 105-138면.
- 이선기, “G20 정상회의시 안전대책방안 : VIP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2010년도 한국테러학회 제5회 정기학술세미나 논문집, 한국테러학회, 2010, 30-38면.
- 이주락, “영·미 집회·시위 관리기법의 검토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27집, 치안정책연구소, 2011.

이중구, “국민이 공감하는 선진 집회시위 관리 방안”,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토론회, 경찰청, 2011.

정우일,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9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9, 190면.

조성제·승재현, “제3세계 국가의 테러방지법제정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9호, 2009, 274-283면.

최시영,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대테러 무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제3권 제1호, 2010 여름호, 167-191면.

최진태, “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2008, 337-358면.

리얼미터(www.realmeter.net)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테러정보통합센터(www.tiic.go.kr)

한국테러학회(www.ka-ts.or.kr)

책임연구보고서 2012-05

국제회의 대비 경찰활동 연구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조 요 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